
서 평

민주주의의 맹아를 찾아서

[서평] 김정인(2015),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 시대의 건널목, 19세기 한국사의 재발견』, 책과함께, 408쪽.

최 우 석*

0.

“1948년 5월 10일은 조선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투표 등
목자들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에
투표를 한 것입니다.”¹⁾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 성별
과 신앙을 묻지않고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졌다.
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제헌국회’가 성립하였고,
7월 17일 제헌헌법을 제정하였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
루어졌다. 남과 북이 갈리어 분단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점과 제주도 지

*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1) YouTube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채널 ‘[한국 현대사 교육 영상2] 대한민국 정부 수립
(본편 : 48분)’에서 35분 45초 이후 참고. <https://youtu.be/GZfUkJgCxiQ>.

역에서 4.3사건이 일어나면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더라도 어쨌든 대한민국 최초의 보통선거였다. 5.10선거의 풍경을 담은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라고 이 날을 칭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당대에도 현재에도 1948년을 기억하고 있다.

1948년 5월 10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작으로 이해해 온 학자들은 미국과 유엔에 의해 민주주의가 이식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시작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지칭되는 선거와 그 선거로 대표되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국한하려 하였다. 김정인 교수의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1948년 5월 10일로 기록해온 역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미군정기 미국에 의해 이식된 ‘제도’로 파악하는 것을 ‘오리엔탈리즘’적 선입견이라고 규정하며 선거 제도보다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된 역사를 살피고자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원, 혹은 맹아를 우리 역사 내부에서 다르게 찾으려고 노력한 저작인 것이다.

1.

저자는 이를 위해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문화적 관점에서 일곱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인민, 자치, 정의, 문명, 도시, 권리, 독립이 그것이다. 각각의 주제에 대한 서술은 1801년 공노비 해방을 시작으로 대략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까지 이어진다. 부분에 따라서는 1920년대, 혹은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한 서술도 있다. 100년 넘게 지속된 ‘기나긴 혁명’의 과정을 적어나간 것이다. 그 일곱 가지 주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민평등을 향한 해방의 길’이란 부제가 붙은 제1장 ‘인민’에서는 노

비, 여성, 백정의 해방이 달성되어간 과정을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민화’를 달성해 나간 역사를 서술했다. 1801년 공노비 해방, 1894년 갑오개혁 정부의 천민 해방과 과부 재혼 허용, 1886년 이화학당을 최초로 한 여성 교육의 시작, 백정들의 독립협회 활동과 1923년 형평사 설립 등의 사건들을 다루었다. 그러면서 제도적 해방을 성취하였던 노비, 여성, 백정 등이 20세기에는 자발적 결사체를 구성해 사회운동과 연대하며 문화적 해방을 추구했던 과정에 주목하였다.

제2장 ‘자치’에서는 천주교와 동학의 종교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진 자치의 경험을 다루었다. 교우촌과 종교 조직이 종교공동체이자 생활공동체로서의 자치 공간으로 작동했던 사실을 엮어내고 있다. 동학도 천주교도 교주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권위를 무시할 수 없는 체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교에서 ‘민주주의적 자치’가 싹틀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천주교는 천주교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성립했기 때문이었고, 동학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이라는 사상적 기반에 기초한 결과였다. 동학이 천도교로 개칭하고 3.1운동을 거친 이후 1920년대에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독재에서 중의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천도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내부 민주화운동이 진행되었음을 강조한 것이 특징적이다.

제3장 ‘정의’에서는 19세기의 다양한 농민항쟁과 농민전쟁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그 운동들이 추구했던 바를 조세 평등주의에 입각한 조세정의 추구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군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폐정개혁안들을 살펴, 기왕의 연구들이 오지영 『동학사』에 실린 ‘폐정개혁안 12개조’에만 매몰되어 포착하지 못 한 경제 정의 실현 요구 내용을 부각시켰다.

제4장 ‘문명’은 유교 문명을 대신해 서양 문명이 19세기 조선의 지배 담론화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 중요한 매개로 학교와 신문에 주목했고 신문과 학교를 통해 민주주의 문화를 익히는 과정이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조선의 문명화를 권력 내부에서 주도한 정치세력은 개화파였다. 저자는 개화파를 친일, 친청, 친미 등의 용어로 외세의존적이었다고 평가내리던 민족주의적 시각이나 반민증적이었다는 민중주의적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그들을 새롭게 ‘인민파’로 부르기를 제안했다.

제5장 ‘도시’는 왕의 도시, 권력의 도시였던 서울이 인민의 결사와 집회의 자유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인민의 도시로 탈바꿈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임오군란 등 도시에서 벌어진 인민 항쟁을 일회적인 봉기가 아닌 전면적 항쟁으로 파악하며 도시 성격의 변화 계기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1894년 이후 본격화된 자발적 결사체들, 특히 독립협회나 국채보상운동, 일진회, 헌정연구회-대한자강회-대한협회 등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도시가 민주주의의 사회공간적 배경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장에서 주목되는 서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학 계열과 독립협회 계열의 결합, 즉 아래로부터의 개혁세력과 위로부터의 개혁세력의 결합 결과물로서 일진회와 대한협회에 주목한 사실이다. 1900년대 대표적 친일 단체인 일진회의 친일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주목했지만 ‘인민’을 매개로 한 민권운동적 측면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외면해왔다. 이후 일진회가 일제에 굴종하면서 반(反)인민적 길로 전향해 나갔고 손병희 등 친도교 세력이 대한협회로 옮겨가 이에 맞서게 된 상황까지 본 장에서 서술하고 있어 대한제국 말기의 민주주의 추구의 복잡한 지형을 드러내 주었다. 또 다른 하나는 1898년 만민공동회와 1919년 3.1운동을 도시라는 공간, 비폭력 저항이라는 외면적 행동양식의 연속성 위에 위치시킨 것이다. 이는 비폭력 투쟁으로서의 3.1운동이 가진 역사성을 공간과 연결지어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비폭력 저항’이라는 외면적 형식 만이 아니라 두 운동 내부의 논리와 운동 내용을 복합적으로 비교 검토해볼 여지는 남아있다.

제6장 ‘권리’는 자율적 개인의 탄생하고 인간 권리로서의 인권과 인민

권리로서의 민권이 의식화된 과정을 밝혔다. 저자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해석을 빌려와 민권은 인권에 참정권이 더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구적 인권 개념이 조선 사회에 시도된 것을 1894년 갑오개혁으로 사법권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기초한 재판소 제도 실시로 보았다. 법치주의에 의한 인권 보호가 사회 내에서 주장되었고 고종 독살 사건의 주동자였던 김홍륙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크게 다루어졌고 무단으로 행해진 처형에 대한 항의로 일시적으로나마 내각 교체를 이루었음에 주목하였다. 대한제국 말기에 민권을 통한 국권 회복 주장과 국권을 강화하기 위해 민권을 억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갈등 속에서 민권론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하였다.

제7장 ‘독립’에서는 독립에 대한 문제를 민주주의 정치 형태와 연관지어 살피고 있다. 민주주의 역사가 국권의 문제와 불가결의 관계를 가지고 결국 독립의 문제랑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는 저자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조선 왕실-대한제국 황실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는 ‘민주(民主)’는 말해질 수 없었고 독립을 위한 방안으로 입헌군주제 논의가 1898년 독립협회와 이후 여러 자발적 결사체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결국 대한제국에서 입헌군주제는 실시되지 않았고 그 결과 나라를 잃고 전제군주도 권력을 잃는 사태로 나아갔던 역사로 저자는 입헌군주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있다. 이제 망국의 상황에서 군주권을 인정한 입헌군주제 대신에 민권을 중시하는 민주공화제가 새로운 대안적 정치체로서 부각되었고 그 흐름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귀결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총 7장의 구성은 1~3장은 조선 사회 안으로부터 확인되는 민주주의 맹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4~5장은 서구 문명과 조우하면서 사회문화적, 공간적으로 민주주의의 토대가 쌓이는 상황을 그렸다. 그리고 마지막 6~7장은 본격적으로 인권, 민권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정치체도로써 민주주의 제도 이식에 대한 논의가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었는지 살핀 것이다.

이상의 김정인 교수의 작업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논쟁과 연관해 큰 의미를 갖는다.

우선은 해방이후 한국사학계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근대화’ 논쟁을 기존의 ‘자본주의’ 중심의 해석에서 ‘민주주의’ 중심의 해석으로 돌려놓는 작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일제가 만들어놓은 식민사관 중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 맹아론’과 ‘식민지 수탈론’ 등이 1960년대 이후 학계에서 제출되었고 1990년대 이후 경제사학계에서 이에 대한 반비판으로 ‘19세기 위기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이 등장하면서 조선 말기-일제강점기에 걸친 근대화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 구도 속에서는 ‘근대화’로 지칭되는 것은 자본주의 달성 여부에 관한 문제 밖에 없었고 서구 근대의 또다른 축으로 여겨져온 민주주의는 무시 혹은 외면당해왔다. 저자는 자본주의 맹아에 대해서는 논쟁했으나 민주주의 기원은 돌아보지 않았던 연구성과들을 반성하며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탄생하고 변화했는가”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탄생에 관한 물음은 최근 10여 년간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둘러싸고 벌어진 ‘자유 민주주의’ 문제, 대한민국 ‘건국절’ 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의 지평을 바꿀 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간 여러 연구자들이 이 논쟁에 답하기 위해 저작들을 발표해왔다.²⁾ 그러나 그 작업들은 계속해서 진보-보수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이다. 김정인 교수의 작업은 이러한 논쟁 구도에 직접 뛰어든 것은 아니다. ‘선거제도’에 기반한 민주주의 제도 성립 보다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민주주의’의

2) 김육훈(2012),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우리 민주주의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 서울: 휴머니스트; 박찬승(201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 파주: 돌베개; 서희경(2012),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한국 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 파주: 창비; 심용환(2017), 『헌법의 상상력: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파주: 사계절; 정종섭(2013),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파주: 나남.

역사성을 되짚어 보면서 양 진영의 논쟁이 만들어놓은 답답한 구도를 뚫어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저자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서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자료에 대한 탐독과 저자의 성실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동학-천도교 연구자인 저자가 독립협회의 『독립신문』을 완독했고, 그래서 본서에서 핵심적인 논의들은 1898년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저자는 독립협회 소멸 이후,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했던 독립협회 세력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했던 동학 세력의 만남을 포착해 전봉준으로 상징되는 인민과 김옥균으로 상징되는 개화파의 만남으로서의 민주주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친일파’ 단체라고만 기억하고 있는 일진회가 등장하고 일진회의 민권론이 1905년 전후 애국계몽기에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국권론과 충돌했던 양상을 다루면서 1900년대 초반 한국 민주주의 문화의 한계 역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손병희 등의 천도교 세력이 일진회와 결별하고 대한협회에서 다시 일부 독립협회 세력과 결합해 민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던 양상을 주목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목하면 “민주주의는 인민과 개화파가 함께 빛은 역사임을 『독립신문』을 완독하며 깨달았다”는 저자의 말에 수긍하게 된다.

3.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는 19세기 말~20세기 초반의 민주주의 역사를 충실히 재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대목에서는 더 치밀하게 다뤄졌으면 하는 아쉬움과 의문들이 남는다. 본 서평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큰 첫 번째로, 저자가 ‘오리엔탈리즘’적 이해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잘못 파악해왔다고 지적한 것에 역으로, ‘옥시덴탈리즘’적으로 서구 문명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서구 문명’이라는 단어에서 표현되는 ‘서구’나 ‘문명’, 이 둘 다 비균질적이며 우리가 이해하는 ‘서구 문명’에 딱 맞아떨어지는 예는 드물다. 특히 제4장 중 ‘서양인이 본 문명화 가능성’이나 제5장 중 ‘문명도 시로의 변화’에서 평가자로 등장하는 서양인들은 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 등의 출신으로 그들의 시선에서 평가되는 ‘서구’, ‘문명’이라는 것이 과연 동질적 수준의 것인지 불분명하다.

본서에서 민주주의의 경우에는 ‘전제군주제’에 대비하여 ‘입헌군주제’와 ‘민주공화제’ 정도의 범주로만 분류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헌군주제’, ‘민주공화제’로 지칭되는 정치제도의 내용에 포괄되는 실상의 편차들은 클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어떤 정형화된 정치체제 하나로 완성된 형태를 이룬 것이 아니었다. 특히 본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19세기의 경우가 더더욱 그렇다. 서구 그리스 로마의 민주주의는 특권계층으로서의 ‘시민’을 대상으로 했으며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진행되어 온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민’ 혹은 ‘시민’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투쟁의 역사였고 그 정의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지적 투쟁의 역사였다. 인민이 되려는 자들과 그들을 인민의 영역에서 내쫓으려는 자들 사이의 피의 전쟁을 통해서 변해온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민주주의는 보다 치열하게 ‘시민’이 누구인가를 둘러싼 장기투쟁에 들어서게 되었다. 부르주아로부터 노동자 계급, 여성 등에게 시민의 범주가 확산되어간 역사다.³⁾ 19세기 ‘서구 문명’의 ‘민주주의’들은 이러한 장기투쟁 속에서 다양한 편차를 지니고 있었다. ‘입헌군주제’나 ‘민주공화제’냐는 가장 표면적 고민을 넘어 어느 선까지 군주

3) 이승원(2104), 『민주주의』, 서울: 책세상, pp. 10-11.

권과 민권의 영역을 인정할지와 누구까지를 ‘시민’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 등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상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 사회에도 그대로 옮겨왔을 것이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논의들은 덜 다뤄진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저자가 민주주의를 보편적 가치로서 주목하고 기존의 민족주의, 민중주의, 근대화론 등의 역사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매개로 포착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논쟁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민주주의 앞에 어떤 가치를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쟁이 남겨진 문제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에서 화두가 되었던 것도 경제 분야에서의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않고서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초차도 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헌법을 넘어설 새로운 헌법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결국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살피고 고찰하는데 있어서 민주주의 내부의 다양한 결들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그 차이들을 단순화 시키면 어떤 민주주의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 또한 희석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7가지 주제들 중 첫 번째로 제시되었던 ‘인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문이 있다. 저자는 ‘인민’이라는 개념을 『독립신문』에 기반하여 정치적 주체이자 문명개화를 선도하는 주체로 해석하고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이끌어갈 주체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인민’을 19세기 당대에 ‘정치적 주체’라던가 ‘민주주의 역사의 주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그 첫 번째다. 두 번째 의문은 1장 본문에 서술된 노비, 여성, 백정이 성취한 100년 간의 인민화 과정, 그 ‘기나긴 혁명’은 과연 본서에 서술된 100여 년의 과정을 살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문제다.

첫 번째 의문을 보다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인민’이라는 개념과 함께 고민해볼 개념으로 국민, 시민, 공민(公民) 등이 있을 것인데 이들에 대한 교통신리가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이다. 이 개념들은 종종 혼용되기

도 하지만 각각이 분명히 별도로 의미하는 바들이 있으며, 근대적 의미로는 19세기 번역 과정을 통해 정착된 것이기 때문에 본서가 다루는 19세기 말~20세기 초반에 가지는 별도의 의미도 민감하게 다를 필요가 있다.

‘인민’이라는 단어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백성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었다. 조선시대 전반을 통해 인민이라는 말은 집합적인 사회구성원 일반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였던 것이다. 개화기에 접어들어서의 인민개념은 『독립신문』 등에서 국민 개념과 치환가능한 정도의 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898년 독립협회 활동에서 점차적으로 인민 개념에 정치적 주체 의미가 담기기 시작하였고 중추원 관제에서 그 위원의 반수를 ‘인민협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있기까지 했다.⁴⁾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유보적 형태로 제시된 것이었기 때문에 독립협회 단계에서 인민이 완전한 정치주체화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선 하원의 개설에 인민이 관여하는 것은 “인민의 지식이 꽤히 넓어진 4~50년 이후의 일”이라고 시기상조론을 펼쳤고, 『독립신문』에서 말하는 국민참여정권의 현실적 모태가 되었던 것은 주민의 1.14%(즉 최고의 부유층)만이 선거권을 가진 동시대 일본이었다. 이는 상당수 성인 남성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던 유럽 국가들의 현실과는 다른 지향이었다. 그렇기에 이를 두고 인민의 본격적인 정치 주체화가 추진되었다는 평가는 선부를 수 있다.⁵⁾ 1905년 이후의 인민 개념 또한 자유주의적 관점보다는 국가중심주의적 시각이 강했고 따라서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였다. 국민 개념과 인민 개념의 혼용도 계속되고 있었다.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선시대에 주로 사용된 유교적 민본주의 사상에 기반한 ‘인민’

4) 박명규(2009), 『국민·인민·시민-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서울: 소화, 2009, pp. 123, 149-157.

5) 박노자(2005), 『개화기의 국민 담론과 그 속의 타자들』,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지음), 소명출판, pp. 234-239.

6) 박명규(2009), pp. 157-160.

표현도 지속되었다고 봐야 한다. 동학농민전쟁의 무장포고문에서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선언을 인민이 개인을 자각하는 선언으로 보고 있지만, 전통적 민본주의적 표현이라는 느낌이 강한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역사를 서술할 때 정치적 주체화와 연관된 단어로 쉽게 떠올리는 것은 인민보다는 시민(市民)이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시민은 서울의 시전상인을 지칭하는 개념이었고 1904년 단계에서야 일반 상민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을 뿐, 아직 정치적 주체로서의 의미를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는 대한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⁷⁾ 시민 개념이 서구와 그 용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르주아 혁명에 기반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한 프랑스 중심의 서구 민주주의 역사와 조선-대한제국이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시민을 대신할 개념으로 쓰인 것은 바로 공민(公民)이다. 루소는 인간(homme)과 공적 시민(citoyen)을 구분했는데, 이후에 공민과 시민은 개념이 혼용되어왔다.⁸⁾ 이와 마찬가지로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성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1919.4.11)에서도 인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시민을 대신하여 공민이 등장하고 있다. 제3조에서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했지만 제5조에서는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민’과 ‘공민’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인정하는 ‘공민’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임시정부 상황에서 공민들의 선거가 진행된 바가 없기에 선거권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없으나 1919년 4월 2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법에 의하면 임시의정원 의원의 자격은 대한국민으로 중등교육을 받은

7) 박명규(2009), pp. 196-197, 212-213.

8) 박명규(2009) pp. 199-205.

만 23세 이상의 남녀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공민자격으로 피선거권을 획득하는 지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 23세’라는 연령제한에 더불어 ‘중등교육’을 받았다는 학력제한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민주주의 제도에서 주로는 세금 납부액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 것과는 다른 기준이지만 인민이 곧 정치적 주체로서의 공민과 일치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단서조항으로 읽을 수 있다. 특히 학력제한이 ‘보통교육’이 아니라 ‘중등교육’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1919년 9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에는 대한민국 인민의 의무로 보통교육을 받을 의무를 설정했다. 그런데 임시의정원법에 규정된 자격은 의무로 제시된 ‘보통교육’을 넘어서 ‘중등교육’을 받은 자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추구되었던 ‘보통교육’, ‘보통선거’ 등에 담긴 ‘보통’의 이념과는 별도로 엘리트주의적인 기준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주의 제도에 담겨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내용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과연 19세기 말~20세기 초 민주주의의 정치주체로서 ‘인민’이 포착되고 추구되었던 것인가 하는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인민’이라는 개념이 전면에 나선 것은 1935년 이후 사회주의운동가들 중심으로 반파시즘 인민전선이 추진된 결과로 보인다.⁹⁾ 그런 점에서 본서에서 인민의 정치주체화를 과도하게 부각시켰던 것 아닌가 싶다. 아직 이 시기의 서구 민주주의 진행상황도 전체 인민의 정치주체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논의들이 있었고 현실도 그렇게 작동하고 있었다는데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감각 속에서 과연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과 대한제국에서는 어느 수준에서 누구를 공민으로 인정하는 민주주의가 추구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100년 간의 기나긴 혁명·노비·여성, 백정의 인민화 과정

9) 박명규(2009), pp. 164-165.

이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결된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혹은 현재까지도 그 인민화 과정은 지속되고 있는건 아닌지 묻고자 함이다. 노비의 경우에는 1801년 공노비 해방, 1894년 노비 해방, 독립협회의 노비제 잔재 청산 운동을 거치면서 인민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법적으로는 1894년 해방을 이루었지만 1896~1898년 독립협회 활동기간에도 여전히 노비제는 사회문화적으로는 해소되지 않았다. 1910년을 전후한 시점에 여운형이나 이회영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집안의 노비를 해방시켜주었다는 이야기는 인구에 회자되는 일화 중 하나다. 이는 독립협회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노비의 해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들은 예전 주인에게서 자유로운 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적인 지배가 아니라 경제적인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독자적인 자산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 주인 집안의 땅을 붙여먹으며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단위의 공동체에서 양반가문과 노비가문의 사회경제적 대물림이 이어졌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점까지 이어져 지역 내부의 갈등 요소가 된 예도 많았다.¹⁰⁾

여성에게 인민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육이었다. 그러나 그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의 것이었는지 되물을 필요가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독립협회나 제국신문에서 주장된 내용에서도 가족과 모성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현모양처(賢母良妻)로서의 여성 역할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요구된 현모양처로서의 여성 역할은 현대까지도 이어졌고 이는 남녀 교육 내용의 차이로 계속해서 재생산되어 왔다. 중학교 교육에서 1995년 이전까지 가정수업은 여성에게만, 기술산업수업은 남성에게만 이루어졌다. 그러한 교육 내용과 교육 결과로서의 직업 선택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내용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10) 박찬승(2009), 『한국전쟁과 마을』,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역사문화학회; 김영미, 『한국전쟁과 마을 연구』, 『중앙사론』 33, 한국중앙사학회. 참고.

다. 이는 인민화의 결과로서,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적 주체화하는데에도 일정한 한계를 줄 수밖에 없다. 1948년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지만 선거에서 단 1명의 여성 국회의원으로 탄생하지 못했던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음의 반증일 것이다. 지금 현재도 직업적으로나 사회적 역할에서 여성의 위치는 여전히 남성을 보조하는데 머물러 있다. 여성의 주체화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백정의 경우에는 1923년 4월 만들어진 형평사 성립과 반형평운동과 투쟁을 다루고 일본 부라쿠민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비교하며 끝맺고 있다. 일본에는 현재도 부라쿠 해방운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에는 천민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주목하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식민지 민족주의에서 백정 역시 다 같이 독립을 쟁취해야 할 민족의 일원으로 인정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나름 타당하지만, 그 중간과정 혹은 그 과정 중의 부침을 생략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반형평운동은 농민·노동자들과 백정출신들의 갈등은 생존을 두고 벌이는 계급갈등이었고 1920년대 이후에도 한참 지속되었을 것이며 그 끝 점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서의 서술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지만 형평사는 1935년 대동사(大同社)로 단체명을 바꾸고 “종래의 투쟁주의적인 운동방침을 일본주의적 협조”로 전환하였다.¹¹⁾ 1945년 해방과 1948년 선거로 그들의 인민화가 완성된 것으로만 서술하는 것으로는 백정이 ‘민족의 일원화’되는 과정, 그리고 계급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의 복잡한 심성을 무화시킬 수 있다.

현재 한국 민주주의 내에서 노비나 백정의 문제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인민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가 해소된 결과라기 보다는 이름이나 모습을 바꿔 다른 문제로 전환된 결과는 아닌가 하는

11) 고숙화(2008), 『형평운동』,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p. 321-324.

의문도 남는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인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나긴 해방’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되기 위한 ‘기나긴 혁명’에 대해서 본서의 후속 작업에서도 계속 염두에 두고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4.

김정인 교수는 본서를 시작으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역사성을 복원하기 위한 3부작 연구를 기획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7년 8월 15일, 두 번째 저작인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가 출간되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인 ‘민주주의 문화와 시민사회’만 남은 상태다.

뒤늦은 서평이지만, 민주주의 3부작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이제껏 쓰여진 바 없는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많은 이들이 과거를 되돌아보는데 있어 중요한 거울이 되어주길 바란다.

